

광주시, '대자보 도시' 구체화...시민공감 확산 속도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전담팀, 소통·홍보 등 28개사업 확정
지하철 연계 시내버스노선 전면 개편
첨단에 전국 첫 '자전거생활권' 구축
'걷고 싶은 문화전당 오방길' 등 조성

광주시가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과 시민 실천 운동에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광주G-패스, 청춘빛포차광장 개방, 광천권역 교통대책 등으로 '대자보 도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발맞춰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 번영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을 적극 알려 시민 참여와 관심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자보 도시 광주 추진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

'대자보도시 광주 추진전담팀'은 '대자보 도시 광주'의 정책을 추진·실행하는 총괄기구로, 광주시, 광주교통공사·광주연구원·광주기후에너지지진연구원·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광주교통문화연구원 등 공공기관, 5개 자치구, 광주경찰청, 광주시교육청,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첫 전담팀 회의에서는 대자보 도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전략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교통정책 방향을 기존의 승용

차 중심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G-패스, 청춘빛포차광장, 광천권역 교통대책 등에 이어 2026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해 대자보 도시로 성큼 나아가갈 예정이다.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자전거 전용도로', '광주전 자전거도로', '첨단지구 일대 전국 최초 자전거 생활권 시범지구' 조성 등 자전거 일상화를 구현한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중심으로 동구청-조대사거리, 서석로 보도확장, 금남로 차없는거리, 문화전당로(광산

길), 푸른길 등 '걷고 싶은 문화전당 오방길'을 조성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자보 도시' 실현의 가장 큰 열쇠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실천으로 보고, '대자보 도시' 효과를 검증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별별 대자보 챌린지 △대자보 도시 정책브랜드 개발 및 홍보콘텐츠 확산 △광주 G-패스 등 대자보 도시 정책 홍보 △교육과정을 통한 대자보 도시 홍보 및 실천역량 제고 등 1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은 △대자보 공감 확산 및 실천운동 △대자보 실천교육 콘텐츠 개발 △운수종사자 대자보 도시 전

환 교육과정 운영 △대자보 시민실천단 구성·운영 등 13개 사업으로 시민 공감대와 정책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광주시는 대자보 관련 교육자료를 제작해 운수종사자, 초·중·고 학생 등에 대한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소책자·영상 등을 제작해 시민참여 행사와 연계 홍보하는 등 광주 곳곳에서 '대자보 도시 광주'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대자보 도시 광주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어린이통학버스 LPG차 전환 지원

신규 구매 32대, 1대당 300만원

광주시는 '2025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비 9600만원을 투입해 신규 구매 LPG 어린이통학버스 32대에 1대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소유자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시설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20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문서24'를 통해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1인 또는 1기관 당 1대씩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21일 이후에는 사업 예산이 남아 있으면 2대 이상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폐차된 경유차량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기존의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외의 차종으로 개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기간에 따라 지급했던 보조금이 회수된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업에 총 38억원을 투입해 607대를 지원했다.

한편, 폐차하는 경유차량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면 조기폐차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3월 초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신청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서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원 등이 20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과 여성친화 공간 및 정책 모니터링 등을 펼친다. 김양배 기자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지자체 선정

행안부 주관 공무원 워크숍
홍보·특색있는 답례품 인정

전남도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 우수사례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 법령 및 정책 추진 상황, 우수사례 발표, 건의 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기부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 △특색있는 답례품으로 전남의 생활인구 증대 기여 △고향사랑 365

기부 캠페인 170여 명 참여 △전남 사랑(愛)서포터즈 55만 명 달성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아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우수사례 발표에서 '도-시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답례품 사례' 등 고향사랑기부제 내용을 공유하고 큰 호응을 얻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이런 뜻깊은 행사에서 곡성군과 함께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며 "2025년에도 창의적 답례품을 개발하고, 도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사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 e음(loveoghyang.go.kr), 액티부키(놀고팸), 국민은행(KB스타뱅킹), 기업은행(I-ONE Bank), 신한은행(신한SOL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에서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는 NH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 '대상' 수상

노인보호 전담변호사 워크
학대피해 전담기관 운영 성과

전남도는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제3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 지난 19일 복지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사회적 존중과 통합 △지역사회 돌봄 △의사소통과 정보 △주거환경 안정성 등 8개 영역을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고령 친화 정책과 성과를 평가하는 상이다.

올해 17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존중받는 노년,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주제로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시책 추진에 적

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노인 인권존중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학대 피해 전담 의료기관 3개소를 지정·운영 중이며, 2024년에는 45건의 의료 지원을 했다.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중사자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 위기가구 신속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에 노인보호 전담 변호사를 각각 위촉해 피해자 37명에게 법률자문 및 소송을 지원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뤄낸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노인 인권이 보호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14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7%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92개 기업 청년기업 최초 인증

전남도는 청년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20일 처음으로 92개 기업을 전남도 청년기업으로 인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18세에서 45세까지 청년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인증 선발해 인증한다.

인증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자금 등 다양한 정책자금의 융자 한도액(상품별 약정 융자액에서 최대 5억원)을 상향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융자금 이자에 지원되는 이자 차액(2.4%p)에 0.5%p를 추가 지원하는 등 이자 부담을 덜어 청년들의 기업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인증 기업이 전남형 강소기업 육

성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제공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도 연계돼 청년 기업가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청년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운영된다. 인증 신청이나 지원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중소벤처기업과 중소기업육성팀(061-286-3752)에 문의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